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정기연 전 영남신북초등학교 교장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먹이 사슬이 존재하며, 인간사회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침략해 피해를 주며, 국가 간에서도 강대국이 약소 민족국가를 침략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인류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간의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국제간의 합의에 따라 유엔이 창설되어 미국 뉴욕에 유엔 본부를 두고 있다.

유엔은 국가 간 분쟁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해 국제간 분쟁을 중재하며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엔 창설 후 최초로 1950년 6·25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해 침략자 북한 공산군과 중공군을 물리쳤다.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의 도움으로 침략자 공산군을 물리치고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이라는 군사동맹을 맺고 미국의 도움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막았으며, 경제가 성장해 선진국대열에 들어섰고, 정치도 자유민주국가로 되었다. 약소 민족국가는 이웃 국가와 동맹을 맺어 침략 국가로부터 서로 돕고 보호하는데 구소련이 붕괴한 후 서방 여러 나라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북대서양동맹(NATO)을 맺어 러시아가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동맹인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침략을 막기 어려워 북대서양 동맹에 가입하려 하는 데 이것을 막으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다.

유럽의 나토 여러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도와 전쟁에 직접 개입해 러시아를 물리쳐야 하지만, 동맹국이 아니므로 간접으로 돕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에 있는 우리나라는 한·미 군사동맹을 맺기 전은 일본 중국 소련의 침략으로 시달렸으며 조선 말기 중국은 대원군을 볼모로 잡아가 3년간 억류했고, 일본은 청·일 전쟁에 승리하자 한국을 합병했지만,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당하고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을 침략할 수 없다. 한국을 침략한다는 것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침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이길 승산이 있을 때 일으킨다. 국가의 총력을 집중해 전쟁 준비를 하고 미사일과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이길 승산이 없으며 오판했다가는 자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세계평화 질서는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이 잘해야 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는 힘을 과시하며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넓히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일어난 전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끼고 있어 항만이 좋으며 국토의 95%가 평지로 평야 지대로서 세계의 곡창지대이며 석유를 비롯한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핵무기 보유국이었으나 핵을 모두 폐기하고 세계평화 유지에 노력하는 자유 민주주의국가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탐을 낸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으며, 무차별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이 사망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 국민은 단결하여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저항하고 있다. 유엔은 러시아에 침략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침략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돕기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돕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인은 합심하여 침략 국가 러시아를 응징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며, 유엔헌장에 따라 침략자를 없애고 국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틈 세에 있어서 일본의 침략 야욕으로 침략당해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남북이 분단되어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으며 지금도 일본은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약소민족 국가로서 외세 침략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이며 이 나라들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모두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 대통령의 국가 수호에 대한 정책에 감사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칼럼

### 도민들의 적극적 신고로

기고

###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근절

김광언 강진경찰서 칠량파출소장 경감



화초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벚꽃 등 본격적인 개화 시기에 맞춰 텃밭에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텃밭 작업 시 양귀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불리는데, 헤로인, 코데인 등으로 가공될 수 있는 국내법상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양귀비가 배양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소규모 재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마 역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재배가 가능하고, 섬유나 종자 취득 또는 마약류 관련 학술 연구 등 제한된 목적만 가능하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및 건물 옥상·화단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성행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매년 집중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양귀비 밀경사범은 333명, 대마는 6명 검거했다. 올해도 4.1~7.31(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집중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기간 중,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양귀비 밀경의 단속 기준이 주(主) 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요컨대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를 위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신고자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절실하다.

### 교차로 우회전 잘 모르겠을때 일단 멈춤

기고

박은유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헛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뭐가 정답일까? 도로교통법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걸까요?” 인터넷 기사의 제목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기사의 댓글이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녹색불이면 무조건 멈추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만 멈추거나 제각각이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매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2022년 현재,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과 동일하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고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우회전하면 된다. 추가된 것은 7.12 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고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한, 4.20부터 골목길 등(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 된다. 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하며,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했다.

계속해서 개정되고 추가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운전자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한다던 보행자 보호 의무도 더욱 잘 지켜질 것이다. 운전자는 잘 모르겠을 때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살펴본 후 아무도 없다면 서행해서 지나가면 된다.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시정지, 서행 구간 등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단속구간이 아니면 신호 위반, 과속을 하는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모두가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될 것이다.

“잘 모르겠을 때 일단 멈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기억하자.

### 드론 산업의 발전과 함께 드론테러 위험성도 증가

기고

서강철 보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상공을 비롯하여 사드가 배치된 성주까지 사진 촬영을 하고 북귀 도중에 추락한 것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드론 테러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소형 무인기를 의미하는 드론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단순취미 취미, 레저 차원을 넘어 테러 및 군사적 위협 수단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도 필요할 때이다.

1990년대 중반에 군사용 정찰 임무를 시작으로 널리 알려진 드론은 2000년 이후부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 저비용으로 민간부분에서 영화와 방송 촬영, 재난과 재해, 구조, 농약살포 등 농업용 및 레저용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등 센서나 장비를 조금만 바꾸면 드론의 쓰임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져 그 활용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이렇듯 천의 얼굴을 가진 드론은 과거 군사용으로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취미용 장난감으로까지 우리의 일상속에서 친숙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올해 43조2000억원에서 2026년에는 90조3000억원으로 두배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드론 시장을 겨냥해 그 동안 안전사고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드론 정책과 비행 규제가 완화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드론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완화로 인해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는 물론 폭탄 및 화생방 테러와 같은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AI 기능이 탑재된 킬러 드론이 등장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중 이던 지난 1.17.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핵심 원유시설에 드론 공격을 하였다.

당시 후티 반군은 10대의 드론으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시설을 공격, 화재가 발생해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반토막이 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미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북한 무인기가 서울과 서해5도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는 첫째, 드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안티드론(Anti-dron)시스템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 및 중요시설에 드론 비행을 목격할 시 112에 신고하는 등 드론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편안한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험이 닥칠때를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보성경찰서도 폭발물·총기, 화생방 등 기존의 훈련 방식에 드론테러 훈련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드론 테러에 대한 경찰 및 국가기관의 준비태세와 안티드론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가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테러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